

호남권 광역경제권 사업 본격화

광주 광산업·전남 해상풍력·전북 태양광 산업 실무책임자 추천

지원단 출범 이어 내달초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발족

‘호남권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구성이 오는 7월까지 완료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도산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할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이 최근 출범한 데 이어 호남 광역경제권 정책과 사업을 조정·심사하는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도 7월초 출범한다.

이들 기구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양대 조직으로, 본격 가동에 따라 광역경제권 사업과 선도산업이 추진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법적 기구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전북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또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추천인사 3명, 시·도지사 추천인사 10명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기구는 광역경제권 계획의 수립, 재원배분 및 평가 관리 등 대경권 광역정책의 조정·심의 기능 등 핵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등 호남광역경제권 3개 단체는 위원 선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 할 사무국과 자문단 인선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사무국은 2개과(기획총괄과, 조사평가과), 총 13명(사무총장 1명, 공무원과원 6명, 연구원 과원 3명, 신규채용 3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장은 전문성 강화와 중립성 유지를 위해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공모를 통해 선임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분야별로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되며, ▲지역산업분과 ▲인력양성 ▲과학기술분과 ▲교통물류망확충분과 ▲

문화관광육성분과 등 4개 분과를 뒤 광역위원회의 정책결정을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호남권 선도산업을 추진할 ‘(재)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이하 지원단·단장 남기석)’은 최근 첨단테크노파크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지원단은 최근 이사진을 구성한 데 이어 이달 말 법인등기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한다.

이사진은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주무국장인 김용환 광주시 경제통상국장, 정병재 전남도 경제과학국장, 이금환 전북도 전략국장 등 당연직 이사와 위촉직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이사로는 이정식 국토연구원장,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 전남테크노파크 송어지니 원장 등이 선임됐다.

지원단은 향후 선도산업 프로젝트 기획·선정,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전반을 집행·총괄하게 된다. 지원단은 ‘친환경부품소재’(광기반 융합육성사업·자동차 부품소재 육성사업),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산업·해상풍력산업) 등 선도산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원단은 선도 산업의 실무책임자(PD·program director)의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광주시는 광산업, 전북은 태양광 산업, 전남은 해상풍력 산업 부문에서 PD를 추천했다. 자동차 부품소재 육성사업의 PD는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선도산업지원단은 이달말까지

선도산업 지원단 법인등기를 마치고 지경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선도 산업 예산으로는 모두 1천266억원이 배정됐으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이다. 연도별 지원예산은 올해 332억원, 2010년에는 436억원, 2011년에는 498억원이다.

사업주무 부처인 지경부는 사업 기간 동안 성과를 평가해 사업기간 연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선도산업지원단이 7월부터 본격업무에 착수하는 등 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사업들이 본격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차질없는 사업추진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입학사정관제 설명회 전남대학교는 23일 오후 살레시오여고에서 학부모와 교사,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학년도 대입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역경제권 5+3 수정안 당론 채택해달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5+2 광역경제권’ 설정과 관련, 24일 오전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만나 ‘5+3’으로 수정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동철 광주시장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0명이 2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정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 등을 면담하기로 했다”며 “이 자리에서는 기존 ‘5+2’으로 설정된 정부의 시행령을 ‘5+3’으로 개정하거나 아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의원들은 당론 채

택이 안 되면 이번 임시국회 개원 협상 카드로라도 사용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며 “이 자리에서는 지난번 광주·전남 국회의원 회동에서 무산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위원 신청 부분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지역의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압박하

에 따라 정 대표 등의 선택이 주목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역 의원들이 ‘버스 때나 뒤에 손 흔드는 격’으로 너무 늦게 행동에 나섰을 뿐 아니라 ‘5+2 광역경제권’ 설정에 무관심했던 그동안 정 대표와 정장선 위원장 등의 태도를 볼 때 당론 채택으로까지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오늘 정세균 대표 면담

세브란스병원 첫 존엄사 시행 각계 반응

“경제적 부담으로 남용 우려” “사전 의사표명 제도화 시급”

세브란스병원이 법인과 가족의 결정에 따라 23일 김모(77) 할머니의 연명치료를 중단한 데 대해 의료계와 생명윤리계, 종교계는 사전 의사표명에 따른 ‘존엄사’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을 밝히면서도 남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법학과)는 이날 “말기 상태에서 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을 의식한 강요된 치료중단 동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또 “이번 판결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무의미한 기계적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 것인데 ‘존엄사’라고 표현하면 자칫 광범위하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로 해석돼 생명 경시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북미 지역에서 ‘존엄사’(Dying with dignity)는 말기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 즉 ‘의사 조력 자살’을 뜻한다.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생명윤리 전공)는 “환자가 생전에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면 추정을 법원이 받아들였는데 자칫 남용 우려가 큰 부분”이라며 “가족이나 보호자의 뜻이 ‘환자의 뜻’으로 변하는 것을 막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호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환자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번 판례를 근거로 의료진이 그러한 보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 차원의 지침이 아니라 법적 제도가 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의료계와 사회 각계층의 합의가 담긴 지침을 만들고 이 지침이 현재 진행 중인 입법에 반영돼야 한다”며 “각 병원이 지침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법제화가 돼야 의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협은 최근 연명치료중단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이날 첫회의를 개최해 앞으로 계획을 논의했다. 특별위원회는 8월말 지침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의료계의 최종안을 도출한 후 국회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종교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런 제도화,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드러났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인 이동의 신부는 “대법원의 이 판결은 언디까지나 김 할머니의 경우에만 국한된 판결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그런데도 판결 이후 병원들이 실천지침을 만드는 과정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도 지난 2일 존엄사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내용을 담은 강론자료를 이달 각 본당에 배포한 바 있다. 구인회 가톨릭대 교수도 “건강보험 제도 등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명치료 중단 법적 요건이 정해진다면 치료 중단이 일반화되고 생명경시로 이어질까 걱정된다”며 성급한 제도화를 경계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 8월 발족

이념·계층·지역·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오는 8월 중에 발족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몇달간 미뤄져 왔던 사회통합위원회 출범을 8월 중에는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양대 국정 목표의 하나인 국민 통합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올해 초부터 사회통합위를 신설하려 했으나 여건이 좋지 않아 계속 연기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이 사회 분열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 출범 시기 확정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라디오연설에서 이념·지

역에 따른 분열을 언급하며 “대중요법보다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2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지나치게 좌-우, 진보-보수라는 이념적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사회통합위는 ▲사회 갈등 해소 ▲차별 요소 제거 ▲양성 평등 구현 등을 목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장은 외부의 덕망있는 학자 출신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50명 가량의 각계 유력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와 광역시도별 지역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연합뉴스

10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로가 크신 분께
대한민국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에 새 걸음마를 걸어드립니다
주택공급과 함께 국민적 복지를 실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